

한전, 해외 수익사업 속얇아...환경단체 공세에 보류

26일 이사회에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안전 올렸다 보류 환경단체 “적자사업 추진” 공세...한전 “수익성 충분” 반박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는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결정을 뒤로 미뤘다.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일단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전으로선 ‘알짜배기’ 해외 사업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한전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기후악당’이라는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환경단체 반발...한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 결정 미뤄

한전은 전날(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아스트라에서 열린 비공개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 추진 관련 안전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초 한전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 안전을 의결한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반여에 걸친 논의에도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사회의 부담 역시 커졌던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단체들이 한전을 두고 ‘기후악당’이라며 여론전에 나서면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석탄사업에 공격 금융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며 “한전이 자바 9·10호기를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사업 투자를 승인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수익성마저 없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은 적자사업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추진하는 베트남 봉양2 석탄화력발전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업 역시 KDI 예타 조사 결과 수익성 부문에서 경제적 타당성의 최소 기준인 1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우리로 기업인데 수익 없겠나”... 수익성 빨간불 켜진 한전의 항변

한전은 ‘답답하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익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제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적자가 날 게 뻔한 사업을 추진하겠느냐는 게 한전의 항변이다.

KDI의 수익성 평가와 달리 정작 자금을 투자하는 대주단은 검증은 거쳐 여신 승인을 완료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여신 승인 획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서 경제성에 공공성부담까지 합한 최종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점수가 모두 0.5 이상이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도 ‘수익성’만 따로 떼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진 않는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보면 사업 분석 결과 AHP 0.5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나 지난해 1조3366억원이란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한전이 ‘알짜배기’로 여기는 해외 사업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한전은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 인하, 민간기업 동반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오유나 기자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 전공자 취업 독보적

5월 고용동향 분석... ‘전문대 입학 이상’ 학력자 취업자 수 증감 인크루트 설문...인문·사회계열 60% “코로나 후 전공변경 고려”

학력, 전공별 취업·실업자 수

취업자 단위 1000명 증가율 단위 %

최종 학력	계열	취업자		실업자					
		2019.05	2020.05	2019.05	2020.05				
중졸 이하	없음	3,920	3,779	-141	-3.6%	114	166	53	46.5%
	전체	9,097	8,753	-344	-3.8%	377	434	57	15.1%
	고졸 이하	4,575	4,411	-164	-3.6%	182	215	33	18.1%
고졸 이상	예수, 체육계열	56	45	-11	-20.3%	0	6	6	3500.9%
	상능공수산계열 등	4,465	4,297	-169	-3.8%	195	213	18	9.4%
	전체	14,306	14,398	93	0.6%	655	678	24	3.6%
전문대 입학 이상	교육	968	971	3	0.3%	37	39	1	4.0%
	예수	1,158	1,152	-6	-0.5%	58	77	20	33.8%
	인문학	1,423	1,391	-32	-2.3%	64	66	3	4.0%
	사회과학, 인문 및 정보학	681	662	-19	-2.8%	43	29	-14	-32.2%
	경영, 행정 및 법학	2,422	2,377	-45	-1.9%	118	110	-8	-6.8%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658	620	-38	-5.8%	16	32	16	101.1%
	정보통신기술	475	594	119	25.2%	18	26	7	40.8%
	공학, 제조 및 건설	3,890	3,883	-7	-0.2%	162	148	-14	-8.4%
	농림어업 및 수의학	188	197	9	5.0%	8	8	0	1.2%
	보건	1,008	1,047	38	3.8%	34	43	9	27.5%
복지	473	526	53	11.2%	39	33	-6	-15.6%	
서비스	962	980	18	1.8%	59	67	9	14.8%	
전체	27,322	26,930	-392	-1.4%	1145	1278	133	11.6%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로부터 추정



에 비해 9만 3000명 증가(0.6%) △고등학교 중퇴·졸업 취업자는 34만4000명 감소(-3.8%) △중졸 이하의 14만1000명이 감소(-3.6%) 했다. 도합 39만2000명이 전년 비 감소했다. 학력이 낮을수록 코로나 19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

이 중 전문대 입학 이상 인구를 전공별로 나눠보면 ‘정보통신기술’ 관련 전공을 가진 취업자가 11만9000명(25.2%) 늘어 독보적으로 가장 큰 증가

세를 보였다. 한국표준교육분류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이란 컴퓨터공학과, ICT 공학부, 정보공학과 등을 의미한다.

자연과학·수학·통계학 전공 최입자 수는 3만8000명(-5.8%) 줄어 의외로 인문학 전공생 취업자 수(-2.3%) 보다 가파르게 감소했다. 대학 전공 분류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였다. 코로나 사태로 제조업 수출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실업난은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했으나 그 이외의 이공계 전공자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큰 충격

김민정 기자



국토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손본다

공청회서 “경차 줄이고 전기·수소차 확대 필요” 제기

앞으로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수소차의 할인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방향은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개선방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통연구원은 경차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경차 할인제도는 지난 1996년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했으나, 경차의 경우 고속 주행 시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보다 5~6배 많다. 또 경차 보유 가구 중 64%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로 파악됐다.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아직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연구원은 주말 여가 장려 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 요금 할증’은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 ‘심야 시간 화물차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한편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통행요금 할인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승호 기자

IMF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괴리...세계경제 회복에 위협”

“기업·가계부채 부담 심화...심각한 경제적 수축 낳을 수 있어”

“거대한 경제적 불확실성 앞에서 불거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다.”

28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이렇게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는데도 금융시장이 경기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되레 활황을 따라 추후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몰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IMF는 “일부 국가의 경제 재개와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의 완화로 시장실리는 강화됐다”며 “심각한 시장 혼란에 대응한 중앙은행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는 재무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각국이 전례가 없던 대규모 재정지원을 실행하면서 신용흐름(credit flows) 유지에 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내렸다.

IMF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전례없는 각국의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계속 떠받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지원한 자금 규모도 약 11조 달러

(약 1경3200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IMF는 “그러나 최근의 경제 지표는 기존의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와 시장의 전망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사이의 단절로 인해 자산가치의 조정과 투자자의 위험 수용 성향이 퇴색할 위험이 커졌다”며 “이는 경제 회복에도 위협적인 요소”라고 우려했다. 추후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현상이 사라지면 시장에 끼어 있던 거품이 사라지면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이슬 기자

7개부처 장관 ‘동행세일’ 흥행 팔 걷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7월1~3일 K-세일 선보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이 대한민국 동행세일 흥행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K팝 스타들은 K-POP과 K-라이브커머스를 새롭게 접목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박영선 장관을 포함한 7개 부처 장관이 동행세일 기간 라이브커머스에 직접 출연한다고 27일 밝혔다.

동행세일 주무부처 장관인 박영선 장관이 먼저 나섰다. 박 장관은 전날(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라이브커머스에서 브랜드 K 제품인 견과파(두레촌)를 완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인절미 초콜릿 △올 차 티백 △핸드폰 크로스 미니백 △요리쪽 딱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창을 확인하면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답했다.

또 박 장관은 이날 정동원군을 비롯한 K팝 스타들이 다음달 1~3일까지 서울에

서 열리는 K-POP과 K-라이브커머스를 새롭게 접목한 행사에 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열리는 3일 동안의 동행세일에는 6개 부처 장관들이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할 예정이다.

1일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선다. 문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시마 등 수산물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며, 이정옥 장관은 여성기업의 제품을 소개한다.

2일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등판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수장으로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내수활성화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마지막날인 3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나서 동행세일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